

# 정부, 2388억 투입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2만6000개 창출

### 광주, 에너지·탄소중립 '뉴딜산업' 210명 채용 추진 전남,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사업 100명 양성

올해 광주와 전남지역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10개가 생겨난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국비 2388억원을 투입해 지역청년 일자리 2만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해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설계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지원할 각 지역의 청년일자리 사업 969개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올해 210명에게 에너지·탄소중립 등 그린뉴딜 관련 산업 분야 중소·중견 기업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광주지역 뉴딜산업 청년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은 100명에게 중소기업 제품 등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조성 및 온라인 마케팅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은 디지털, 기초과학, 기계분야 기업에 대한 맞춤형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들이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50명을 모집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1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진행해 당초 목표(8만 8000명)보다 33% 많은 11만700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에 따르면 1단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93.1%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통해 지역생산 5718억원, 부가가치 2404억원, 취업재창출 4745명의 유발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수요를 반영해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 3개 유형을 신설해 2만6000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혁신형 일자리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균형뉴딜 등과 연계해 지역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종료 후 3년차에 정규직을 유지할 경우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1년간 지원한다.

상생기반대응형 일자리는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초기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멸위기에 내 청년의 신규 창업 지원시에는 1-2년 간 연 1500만원을 지원하고, 3년차 청년 신규 채용시 인건비를 1년간 24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외 지역 내 청년이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

1년간 1500만원 지원, 2년차 청년 추가 채용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를 1년간 2400만원 지원하게 된다

지역포용형 일자리는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청년이 직무경력 쌓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연 225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각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다른 지역 거주자는 참여자로 선정·통보된 뒤 1-3개월 사이에 해당 지자체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별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은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속 대책 논의  
이용섭 광주시장이 9일 오전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지역재난대책본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해 사고 피해복구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스마트 뿌리산업 생태계 조성 총력

### 스마트 금형 제조데이터 활용 혁신기반구축사업 등 추진

광주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변화 정책에 맞춰 지역 뿌리기업의 스마트화사업을 지원하는 등 뿌리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공정(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에서 플라스틱-세라믹 등을 포함한 소재 다원화와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8개 차세대 공정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그동안 자동차산업, 가전산업의 근간이 되는 지역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과 기반구축 등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번 정부정책에 맞춰 지역 금형산업을 시작으로 고도화, 첨단화를 위한 뿌리산업의 스마트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91억원을 투입해 금형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IoT, 빅데이터 기반 금형제작 가치사슬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1910개 제품, 8만5000여 건의 금형 제작데이터를 확보하고, 장비운영시스템 개발에 활용토록 했다.

또 IoT, 빅데이터, ICT를 설계·제작·시험 등 공정에 적용해 납기 단축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수출경쟁력 강화 등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후속사업으로 금형관련 제조데이터,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금형설계 지능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3년간 143억원을 들여 '스마트 금형 제조데이터 활용 혁신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설계시간 단축, 설계불량 감소, 제작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제조 원가가 절감되면서, 지역 기업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부족한 설계인력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지역 연구산업간 연계와 뿌리산업의 점진적 고도화를 통해 지역 제조업이 동반성장하고 지역 경제에 특화된 뿌리가 되도록 뿌리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2개년 883억원 확보

### 10년간 광역·지방계정 2조4000억

전남도가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을 지원키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개년(2022-2023년) 사업비로 광역단위 지자체 중 최대 금액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한다.

광역지자체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인구감소 지수, 재정·인구여건 등을 고려해 15개 시·도에 정책 배분한다.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추가해 제출한 투자계획의 목표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가능성을 따져 평균의 200% 한도에서 차등 지급한다.

전남도는 광역계정 2개년 사업비로 883억원을 확보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848억원), 강원

(603억원), 전북(560억원) 순이었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고흥, 곡성 등 16개 군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평균 80억원, 최대 16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어서 전남도는 광역계정 500억원, 지방계정 1900억원 등 해마다 2400억원, 10년간 2조4000억원 가량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기초지자체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금 차등 지원 방침에 맞춰, 인구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시군 관계공무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컨설팅 지원 등 기금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을 막고, 농어촌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인구감소 지역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초지자체 평가 폐지'를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탄소중립 실현 공공부문 태양광 확대

### 579억 투입 온실가스 7000t 감축

전남도는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내 환경기초시설 10곳에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4개 사·군 정수장 4개소, 하수처리장 4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장 2개소 등에 15억여원을 들여 총 61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환경기초시설의 유류부지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한 전력으로 시설을 가동함으로써 그만큼 온실가스를 자체를 상쇄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22개 사·군 환경기초시설에 총사업비 약 579억원을 들여 1만413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이 발전 설비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1만5220MWh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7000t 정도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77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이 많은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가족(30평 이하) 수목장

**이제는 "수목장"입니다.**

나를 위해, 후대를 위해, 환경을 위해 수목장으로~

- 1 매장,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저렴
- 2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
- 3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

**수목장 장점**



개인 수목장 조성 과정



가족(30평 이하) 수목장

**개인묘지 수목장 전환**  
가족묘, 문중묘 → 수목장 전환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  
후손들에게 묘지 관리를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 있을까요?  
**문의: 062-464-9190**